



가상자산의 법적 리스크와 기회

한국과 베트남을 중심으로

발표자 : 오형철 변호사 (마일스톤컨설팅/법무법인 시우)

가상자산 시장의 개요

- 1 2023년 가상자산 시장 규모
- 2 가상자산의 주요 특징 및 발전 배경
- 3 시장 동향



가상자산의 법적 성격

한국

특금법에서 가상자산은
사적 자산으로 간주

베트남

가상자산 사용 금지 및 규제,
벌금 및 형사 처벌

국제적 관점

주요 국가들의 규제와 법적 정의 비교
(미국, EU, 일본 등)



한국의 법적 규제 현황

1

특정금융정보법 (특금법)

자금세탁 방지와 가상자산 사업자의 의무

2

외국환거래법

가상자산 관련 외환거래 규제

3

과세 법안

가상자산 소득 과세 (2027년부터 시행 예정)

4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투자자 보호를 위한 최근 입법 동향

특정금융정보법

가상자산사업자(VASP)에 대한 자금세탁 방지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가상자산사업자는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1.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해야 합니다.
2. 고객 확인(KYC, Know Your Customer) 절차를 수행해야 합니다.
3. 의심거래가 발생할 경우 이를 보고해야 합니다.

외국환거래법

이 법은 외환 거래와 관련된 규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가상자산과 관련해서는 특히 가상자산을 통한 환치기나 불법 자금 이동을 방지하기 위한 근거로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가상자산을 이용해 해외로 자금을 이동시키는 경우, 이것이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 법은 2023년 6월에 국회를 통과하여, 2024년 7월부터 전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이 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상자산의 불공정 거래 행위를 규제합니다.
2. 이용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강화합니다.

가상자산 과세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문제입니다.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를 2025년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상자산의 양도나 대여로 인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2. 2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3. 단, 연간 250만 원 이하의 소득은 비과세됩니다.



베트남의 법적 규제 현황

2017년 총리령

가상자산 사용 금지

형사 처벌 및 벌금

불법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규제

외환법과의 관계

자본 유출과 환치기 문제

향후 법적 변화 전망

베트남 내 가상자산에 대한 정책적 논의

가상자산 거래의 현재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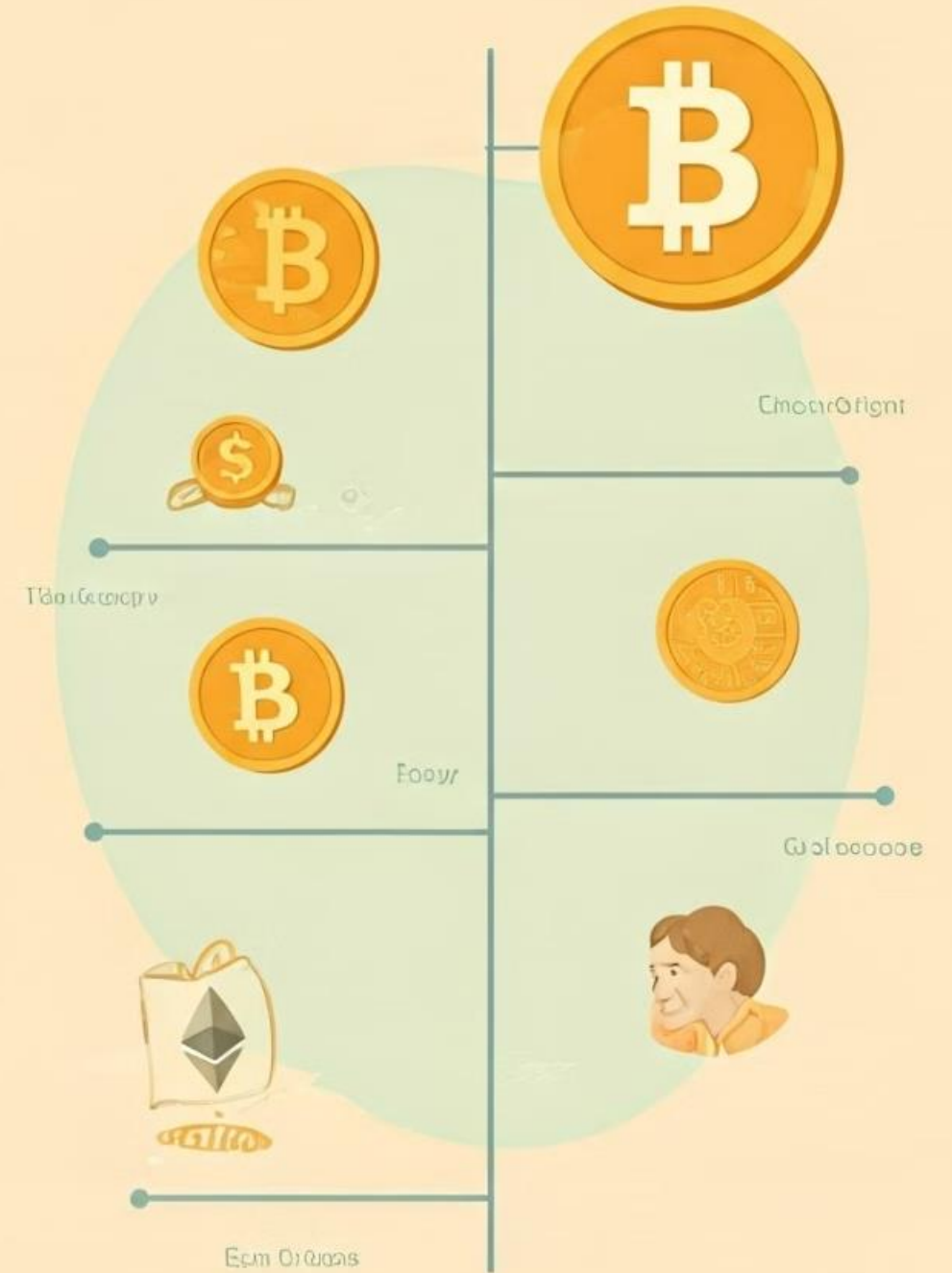
- 최근 가상자산을 이용한 거래 크게 증가 → 언론보도에 따르면 가상자산을 활용한 거래규모는 약 10조원에 달한다고 함
- 구체적인 사례로 중국인들의 물품 대금을 국내에서 영수 대행하는 과정에서 대규모 환치기 사례가 적발되었다고 언론 보도. 다만 이것이 환치기에 해당하는지 부분은 불분명

규제당국의 입장

- 규제당국은 상기 행위를 모두 외국환거래법 위반 및 자금세탁 행위로 간주하고, 강력한 단속을 진행중
- 가상자산을 통한 국외자금유출은 국가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수 있다는 입장
- 현재 법령으로 최종 처벌이 되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입법을 통해서라도 처벌할 것으로 보여짐

주요 판례 및 실제 사례 분석

- 1** 환치기 및 자금세탁 사례
주요 법적 처벌 사례
- 2** ATM 인출을 통한 불법 자금 이동
관련 판결
- 3** 미신고 자본거래 사례
국경 간 거래에서의 문제점
- 4** 거래소 포인트 및 비트코인 이용
사례
법적 대응 및 판례



환치기 및 자금세탁 사례

사건 개요:

- 기간: 2021년~2022년
- 행위: 피고인들은 여러 은행을 통해 수조 원을 해외로 송금
- 방법:
 - 무역대금을 해외로 보내는 것처럼 위장
 - 무역회사로 위장한 페이퍼컴퍼니를 운영
 - 해외 코인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을 구매한 후, 이를 국내 거래소로 전송하여 소위 '김치 프리미엄'을 이용해 판매

법적 대응:

- 검찰은 외국환거래법 위반, 업무방해,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
- 1심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고단5940 사건, 2024년 4월 판결결):
 - 외국환거래법 위반 관련: 피고인들의 행위는 '송금 사무처리의 위임'으로, 실제 송금은 은행이 실행했으므로 위법이 아니라고 판단
 - 업무방해 혐의 관련: 은행의 외환 송금업무를 방해하지 않았으므로 무죄로 판단
 - 특금법 위반 관련: 피고인들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영업한 것이 아니므로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음

시사점:

- 현행 법률의 해석에 따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아닐 수 있음
- 가상자산사업자 여부 판단에 엄격한 기준이 적용됨
- 법률의 해석과 적용에 명확한 기준이 필요함을 시사

주의사항:

- 이는 1심 판결이며, 항소심 및 대법원에서 판결이 변경될 수 있음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영리를 목적으로 동종 행위를 계속, 반복적으로 수행

-가상자산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거래 상대방에게 가상자산을 매도, 매수하겠다고 **광고**를 했는지

*부수적으로 가상자산과 관련된 **투자자문**을 제공했는지

***다른 사람들의** 돈을 취급하거나 **그들을 위해** 가상자산거래에 참가했는지

*지속적으로 **고객을 확보**했는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

-특히 ‘가상자산을 매도, 매수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했다’ 고 하기 위해서는
불특정 다수 고객을 상대로 반복적인 영업행위를 하였어야

ATM 인출사례

두 번째로 살펴볼 사례는 해외 ATM을 이용한 가상자산 거래 사건

사건 개요:

- 행위자: A씨
- 목적: 가상자산 시세차익 취득
- 방법:
 1. 국내은행 발행 체크카드로 해외 ATM에서 미화를 출금
 2. 해외 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을 구매한 후, 이를 국내 거래소로 이체하여 처분

법적 대응:

- 세관: 외국환거래법 제16조 제4호에 따른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등을 통하지 아니한 지급 또는 수령'에 해당한다며 과태료를 부과
- 법원 판결: 외국환거래법의 취지 및 관련 규정을 종합하여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A씨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을 취소
- 결과: 세관이 불복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A씨 최종 승소).

시사점:

1. 해외 ATM 인출을 통한 가상자산 거래가 외국환거래법 위반이 아닐 수 있음
2. 법률의 문언 및 취지를 종합적으로 해석하여 판단해야 함

10억원 이상의 미신고 자본거래 여부가 쟁점인 사례

세 번째로 살펴볼 사례는 대규모 자본거래의 신고 의무와 관련된 사건

사건 개요:

- 행위자: 갑
- 기간: 2018년 1월 2일 ~ 3월 3일
- 내용:
 1. 미국에 거주하는 비거주자들과 가상자산 구입 및 전송을 위한 조합 유사 계약을 체결
 2. 총 462회에 걸쳐 미화 1,299,586달러(한화 약 13억 8,400만 원)를 송금
- 혐의: 한국은행 총재에게 신고 없이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 자본거래를 했다는 이유로 기소

법적 대응:

- 하급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고정612 판결):
 1. 단순히 총 송금액이 10억 원을 넘는다는 이유만으로 미신고 자본거래로 볼 수 없다고 판단
 2. 처벌을 피하기 위해 금액을 나누어 거래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죄라고 보았음
- 결과: 무죄 판결

거래소 포인트를 통한 암호화폐 매입사례

마지막으로 살펴볼 사례는 거래소 포인트를 이용한 가상자산 거래 사건

사건 개요:

- 행위자: 피의자
- 방법:
 1. 해외 암호화폐 거래소(A 거래소)에 회원 가입
 2. 국내은행을 통해 A 거래소의 해외은행 계좌로 외화를 송금
 3. 송금한 외화가 거래소 포인트로 전환
 4. 해당 포인트로 암호화폐를 구매한 후 국내 거래소(B 거래소)로 전송.

법적 대응:

- 처분 결과:
 1. 해외은행 계좌의 명의인은 A 거래소이며, 피의자가 아닌 점을 고려
 2. 거래소 포인트는 대외지급수단 또는 채권 매입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3. 최종적으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

시사점: 거래소 포인트를 통한 암호화폐 거래가 외국환거래법 위반이 아니라는 사례



가상자산과 국제 규제 동향



미국

미국의 가상자산 규제 방향



EU

EU의 가상자산 규제 방향



일본

일본의 가상자산 규제 방향



FATF

FATF(자금세탁방지기구)의
국제 규제 가이드라인

국제 규제 조화의 필요성 및 기업의 대응 전략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비트코인을 '상품'으로 분류

한편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일부 가상자산을 '증권'으로 간주하여 규제

EU

2023년 6월, '암호자산시장법(MiCA)'을 최종 승인하여 가상자산에 대한 통합적인 규제 체계를 마련

일본

가상자산을 '암호자산'으로 정의하고, 이를 결제 수단으로 인정하면서도 엄격한 규제를 적용



질문 & 답변

ohc@siwoo-law.com